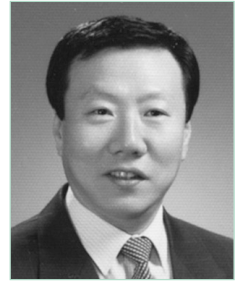


Column

의료산업 육성



글·김윤수 |
서울대운병원장
서울시병원회장

“의료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으로 선진국은 물론 주변 국가들도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이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의료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시한 ‘국민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안문’ 내용 중 일부이다.

한마디로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료산업’이란 말이 나온 것은 그다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서비스 업종의 하나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그 근간에 이루고 있는 의료, 즉 의사나 의료기관들의 의료행위가 경영과 희생과 봉사정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정부나 국민으로부터의 의료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전환과 함께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시켜 경영 합리화를 꾀해 나가자는 염원이 의료산업이란 말을 등장시키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의료산업에 대한 병원계나 그 주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그 동안 이 문제를 다룬 회의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3월 27일 서울시병원회가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앞서 ‘병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의료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이 세미나의 목표는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새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발맞추어 의료의 선진화로 병원들의 경영활성화를 꾀하는데 두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온 서울대 조동성 교수(경영학)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현재 병원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그 수는 많으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곳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서 산업화 국제화 노력을 통해 부족한 자본과 시설을 확충할 것과 책임소재가 분명한 시스템 창출과 경쟁의 일상화, 연관된 산업과의 투명성 확보 및 경쟁체제 도입,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 및 산업 비전의 확립, 병원산업에서의 기업가 정신 제고,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대형병원의 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병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주제를 갖고 나온 연세대 조우현 교수는 의료산업의 대두가 의료환경의 변화에 그 근간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 생활습관 질환, 의료수요 증가 등 고객수요의 증가와 함께 의료기관과 병상의 급격한 증가, 대형병원의 신·증축 등 의료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역시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와 시장·경쟁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료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병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강연을 통해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화와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는 정부 부처별, 사회이익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병원서비스산업화에 대한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국내 병원서비스산업은 제주도특별자치도, 경제특구 등에 외국영리의료기관 진출,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의 등장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용균 실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의료기관의 자금 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과 공공의료보험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실제 환자들의 부담금을 줄이고, 의료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념정립이 요구 된다”고 덧붙였다.

역시 이날 세미나 강연자로 나온 경원대 이재희 교수는 “의료산업 육성정책은 매우 효과적인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e-Health 등을 통한 의료정보 공유 확대 및 경쟁 활성화,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및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 정부측의 강연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김강립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정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보건의료가 산업적 가치가 크다’면서 “새 정부는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자율적인 통제와 함께 시장의 순기능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료 중심의 보장을 강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책임에 중점을 두고, 생산적인 혁신과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의료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란 제목의 활동백서를 보면 의료산업에 대한 개념과 정부의 추진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백서에서 정부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 등 생명현상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인력·시설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시장 단위의 치열한 경쟁과 임상시험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소수의 선두기업이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후발주자의 세계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산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이 백서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시장의 환경은 기업이나 국민·정부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와 함께 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대외무역의 측면에선 WTO에 이어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세계화의 진전으로 의료산업 분야가 국내 시장 위주의 ‘작은 경쟁’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큰 경쟁’,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운명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밝혀 의료의 산업화가 세계적인 흐름에 영합하는 정책임을 내비치고 있다.

이 백서에서 보면 기술적인 측면의 경우 생명공학과 IT 기술 등이 급격히 발달해 그것을 응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이제는 생명공학·IT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제품 개발을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진입,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은 종합적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재택의료, 원격진료 등 더욱 편리하고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의 대처방식도 변하고 있는데 미국시장 매출 10위권에 드는 한 글로벌 거대 제약사의 경우 대부분이 2010년에 특허가 만료된다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안정적 성장 및 임상 파이프라인 유지를 위한 공격적인 기업 간 인수합병, 벤처와 연구협력, 라이선싱 등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 분야의 다국적 기업은 자체적인 전기·전자·기계·제어계측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전자회사를 모체로 한 계열사 간 기술개발, 기술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과 제품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동시에 제품 및 기술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특히 생명공학·신약·첨단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기술 등에 대해 임상적 결과를 확인하는 현장으로

의료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의료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안전보장, 건강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산업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변화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성의 확보가 의료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양질의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의료비 절감, 노동생산성 향상,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높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 바로 산업화의 결과인 것이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의료산업의 기본이 되는 IT, BT, NT 등 신기술의 활용과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WTO, 한미 FTA 환경 같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신속한 규제 시스템의 변화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백서는 이렇게 밝히면서 의료산업은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반면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의료시장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의료가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의료산업 강대국이 되려면 정부와 학계, 기업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냉정하게 의료시장의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의료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전략과 정책과제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인 것 같다. 우리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인식에 한번 기대를 걸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KHA**